

【헌 법 25문】

【문 1】 다음 중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설·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일반적 법률유보를 규정한 조항이다.
- ② 기본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③ 과잉금지 원칙은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인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 ④ 기본권의 제한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면 당연히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문 2】 위헌법률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정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미 폐지된 법률은 거듭 효력을 상실시킬 실익이 없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문 3】 국회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② 국회의원은 현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③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제명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문 4】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나 사법부의 노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중임과 연임이 금지된다.
- ②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자율을 위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독립을 그 내용으로 한다.
- ③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법관은 결정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다.
- ④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 5】 입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④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의 폐회중에는 그러하지 못한다.

【문 6】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 7】 사면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혐의의 사면은 물론 감형 그리고 복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② 사면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벌 또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 ③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특별사면은 형집행면제의 효과가 있다.

【문 8】 다음 중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부여하고 있다.
-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③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문 9】 다음 중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은 최고 회계감사기관으로서 공무원의 직무감찰권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특색이 있다.
- ② 감사원은 변상책임의 유무에 관한 판정권을 갖는다.
- ③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직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④ 감사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여도 수사권은 없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뿐이다.

【문10】 재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된다.
- ③ 재판공개 대상에는 가사비송절차, 소송법상 결정·명령도 포함된다.
- ④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문11】 헌법 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국회의원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함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문12】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룰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근거하여 법령에 정한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행위에 대하여만 재판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재판청구행위에 대하여는 그 의무가 없다.
- ③ 상소심에서 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소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우리 법제하에서 재판청구권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문13】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정당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정당 대표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은 정당 내부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정당의 당내 경선에 관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에게 제공된 금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정당에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④ 우리 헌법의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의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군소정당의 배제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풍토가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자주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지 특정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반영하려는 지역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헌법에 어긋난 입법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14】 우리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 ②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③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④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들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문15】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선거관련 법률에서 저조한 투표율에 불구하고 유효투표의 다수만 얻으면 당선인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유권자에게 별도의 정당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구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과열선거운동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 ④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2001년 현재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의 상하 50%로 볼 수 있지만, 상당기간 지난 후에는 상하 33⅓% 또는 그 미만을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16】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③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도가 국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밝힌 것이다.
- ④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주에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17】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본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② 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대한 법령질의회신
- ③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
- ④ 수사기관의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리

【문18】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②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문19】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업의 자유에서의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
- ② 법인은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 ③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轉職)의 자유는 그 성격상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며, 따라서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하여질 수 있다.
- ④ 단란주점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20】 근로3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 ②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문21】 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③ 국·공립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졸업자를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④ 존·비속관계에 의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59조 제2항(존속상해치사죄)은 그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문22】 참정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 ②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선거법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④ 주민투표권도 그 성질상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다.

【문23】 다음 중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설·판례에 의함)

- ① 면책특권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국회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행사나 그 기능수행의 보장과는 무관하다.
- ②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 면제된다.
- ③ 국회의 본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만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 ④ 원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문24】 납세의 의무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②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를 감시할 수 있으므로,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다.
- ③ 납세의 의무는 역사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을 위한 소극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국민주권주의 사상하에서는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의 형성을 의미하는 적극적 성격을 가진다.
- ④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

【문25】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다른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③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결정시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심의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준법서약은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 ④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법 적용기관이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양심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할 것인지에 관하여 숙고하여야 한다.